데스크 시각

1987년과 2017년, 그리고 호남

박 치 경
편집부국장·정치부장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딱 30년 전과 판박이다. 4당 체제와 개헌 논의까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올 19대 대선을 앞둔 정치 상황 말이다.

우선 오늘까지로만 보면 19대 대선은 다자구도 형국이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제2당인 새누리당과 3당인 국민의당, 새누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칭)개혁보수신당 등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는 4개에 이른다. 30년 전에는 민주정의당(노태우), 민주통일당(김영삼), 평화민주당(김대중), 신민주공화당(김종필) 등 4개로 갈려 대선에 각기 독자 후보가 출마했다.

정당 난립은 30년 전 그대로다. 지금은 2개의 보수 정당과 2개의 야당으로 나뉘어 있으니 30년 전 민정당-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 등 '2與 2野'로 양분된 상황과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 있을까?

30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4당 구조 형성의 원동력도 실은 매한가지다. 1987년 4당 체제는 이른바 '86 항쟁'의 산물이었다. 화순 출신 연세대생 이한열의 '선혈'과 수많은 '넥타이 부대'의 '땀과 눈물'을 밑거름 삼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철권 통치를 무너뜨린 후 얻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로 87년 4자 대결이 가능했다.

정치 상황 30년 전과 판박이

그로부터 다시 서른 해가 흐른 지금, 국민의 힘이 새로운 대선판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어둠을 거둬 냈던 '1000만의 촛불'을 징검다리로 깨끗한 사회의 문이 열리기를 갈망하며 올해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다시 헌법 개정을 통해 13대 대선 직전 9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87 체제'를 깨뜨릴 시점을 맞았다.

13대 대선의 국민적 열망은 '민주주의'였다. 박정희 독재 18년에 이어 전두환 체제에서 질식하던 국민은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비로소 직선제를 쟁취했다. 1972년 10월유신 단행과 함께 15년 동안 '체육관 선거'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유권자들은 그 당시 마침내 제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원론적 민주주의의 기쁨에 젖었다.

그러나 87 대선 결과는 민의와는 동떨어졌다.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후보가 각자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가는 바람에 군부정권 종식이라는 국민 소망과는 달리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다.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불행의 그림자는 군부정권 5년 연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대선 직후 1988년 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참패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식물정권 상태에 이른 노태우는 김영삼·김종필을 끌어들여 이른바 '구국의 결단'이라는 미명 아래 3당 통합으로 인위적인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만든다. 이후 민자당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보수의 적폐는 마침내 '아줌마'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시대의 막장극으로 치부를 드러냈다. 이 여파로 '친박' 대 '비박' 집안싸움이 일어났고 유례없는 보수 여당의 분당 사태를 맞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호남 배려, 실천 의지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이름을 바꾼 것은 그때그때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한 옷 갈아입기 성격이 강했다. 작금 보수 정당이 둘로 갈라진 근저에도 무서운 민심이 깔려 있다. 즉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촛불'의 두려움을 뒤늦게 깨닫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민의가 원동력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올 대선에서 국민의 바람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시대정신'의 실천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국민 요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이 불러온 빈부-이념-지역-세대 간 사회 양극화와 남북 갈등을 치유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점이지만 국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폐단을 닦아 내고, 새 기운을 불어넣어야 할 19대 대선 지형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야당은 갈라져 있는 가운데 겉으로는 등 돌린 것처럼 보이는 보수는 이념과 정책, 지역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다시 손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 강한 '보수 바람'이 불어닥쳐 '정권 교체'를 향해 타오르는 촛불을 꺼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호남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87년 대선 때는 민주주의 표상이자 호남 주자인 김대중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인 데다 야권은 갈려 있고, 이른바 '제3지대'까지 다양한 대선 트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니 후보를 고르는 고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묻고 싶다. 적어도 87년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아울러 뒤늦게 호남 구애에 열을 올리는 여러 대선 주자들에게도 확인받고 싶다. 호남을 찾을 때마다 단골로 내놓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중용하고 예산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중간 투표로 신임을 물을 용의라도 있는지.

/unipark@kwangju.co.kr

은펜칼럼

YOLO, 한 번 뿐인 인생

〈You Only Live Once〉

옥 영 석
농협경제지주 팀장

멀쩡히 대학을 다니던 딸아이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선언했다. 이유인즉 친구들과 두 달 동안 유럽을 다녀오겠다는 것이었다. 여행경비는 아르바이트로 벌고, 넓은 세상을 보고 오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 어려웠다.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공부를 해 장학금을 타고, 여행은 방학기간에 가면 된다고 설득해 보았지만 친구들과 한 약속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것이 YOLO의 발현이라는 건 뒤늦게 알았지만 내 주변에는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지난 9월 옥스퍼드 사전 신조어에 오른 YOLO는 'You Only Live Once' 의 첫 자를 따 '인생은 한 번 뿐이니 후회 없이 살자'는 뜻이란다. 너무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나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가자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왠지 내게는 놀고 보자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온다.

여하튼 아무리 양보해도 휴학까지 해가며 여행을 간다는 게 보통의 50대 가장인 내게 이해될 리 없었다. 더군다나 딸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는커녕, 남의 일 보듯 하는 아내는 내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다. 딸이야 철이 없어 그런다지만 '지금 안가면 언제 가보겠냐'며 편을 드는 판이니 집에선 나만 고집스런 '꼴통'에 왕따가 되어 갔다.

30년 전 대학 2학년이면 어려운 집안형편에 공부와 일, 취업고민에, 친구 서너 명만 모여도 나랏일에 애를 태웠건만 아이를 온실 속에서 자신만 아는 화초로 키워온 건 아닌지 후회스러웠다. 영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마저 스스로 하려들지 않던 아이가 제 몸 건사하는 것도 어려울 터에, 여차하면 들려오는 테러소식도 쉬 마음먹을 수 없게 하는 걱정거리였다.

기어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한다고 귀가가 늦어지는 아이를 두고 부부싸움을 몇 번 하고나서는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숙소위치와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매일 전화한다는 약속을 하고 아이는 출발했다. 프랑스, 독일, 터키 등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테러 속에서도 또래끼리의 여행이라, 영상전화 속 아이는 들떠 있었고, 감기에 걸리고서도 신나는 표정이었다. 여권을 잃어버려 난감한 지경에서도 공관을 통해 해결하고, 지갑을 잃어버려 중간에 돈을 보내긴 했어도 별 탈없이 돌아왔다.

지나고 보니 유학도 보낼진대, 여행 좀 다녀오는 게 뭔 소란이었던가 싶기도 하고, 한 학기를 보내기엔 너무 큰 투자라는 아쉬움도 남지만, 자식이 불안한 장래를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무엇하고 있었나 생각하니 부모노릇이란 게 새삼 어렵게 느껴졌다.

매년 트렌드코리아를 발행해 소비트렌드를 예측하고 있는 김난도 교수는 올해 주목할 키워드로 '각자도생'과 'YOLO Life'를 꼽았다.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게 각자도생이고, 그 절박한 심정이 현실지향적 소비로 나타난 것이 'YOLO'라는 것이다.

과거나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언제일지 모를 일에 대비해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맛있는 음식과 여행을 즐기고 순간의 소비를 지향하는 풍조.

옳고 그름을 떠나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중년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 달가운 현상은 아니지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시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지금처럼 이자와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무언가 아끼고 희생하며 투자한다는 것이 부질없고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얼 준비한다고 잘 되리란 보장이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늘어만 간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봐야 집 한 채 사기가 어렵고,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현실도피로 이어질까 무섭다.

문제는 남의 일이나 이웃집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고,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꿈꾸며

장 혜 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지난 2016년은 여성혐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급부상한 해였다. 그동안 여성혐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혐오 논란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최근의 사건으로는 군가산점제로부터 촉발되었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폐지되었다. 이후 군가산점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젠더 이슈가 되었다. 군가산점제 논란이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논리로 확산된 데에는 인터넷 사용 활성화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시대는 '유연성'이라는 단어로 사회를 재편한다. 이 말은 '경쟁'이라는 단어로 환치 가능하다. 경쟁으로 환치된 신자유주의 시대 특징은 느림, 장기(Long Term)보다 신속한,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민주주의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상호 헌신, 성실한 관계와 같은 장기(Long Term)적인 가치가 중요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유연성', '경쟁'이 목표인 사회에서 장기적인 것은 변화의 걸림돌이 된다. 급변하는 사회, 경쟁주의로 내몰린 남성들은 국제적, 국내적 정세변화보다 여성을 경쟁상대로 지정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빠르기 때문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위험한 두 가지 도덕적 감정은 혐오감(disgust)과 수치심(shame)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인간 육체의 결함, 나약함, 의존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즉, 혐오감은 타인의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혐오감이 만연한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어떻게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가. 그것은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놓는 것이다. 여성을 혐오하기 전에 여성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격차를 발표한 2000년부터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는 나라의 여성, 남성보다 36.7% 적게 받는 여성,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29개 조사국 중에서 29위를 차지한 나라의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이다. 또 세계경제포럼의 성차별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를 차지한 나라의 여성, 교육수준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지위는 최하위인 나라의 여성. 그 여성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내이며, 우리의 누이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여성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혐오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갈등과 변화를 앞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위에 놓여있다. 여성혐오, 젠더 갈등,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파장 등 보편적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시험대는 날카롭고 엄중하다. 그 엄중함을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으로, 경청으로, 여성혐오와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엉뚱한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끈다"고 했다. 물론, 여성주의적 관점의 '여성적인 것'이 아닌 줄 안다. 하지만, 여성적인 것의 상징인 부드러움은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를 앞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힘이다.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힘!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폐기 대상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란 말인가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축소, 친일·독재 미화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으며 서울과 경기·인천 등 10개 교육청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구학교 지정 제도는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로 교육하도록 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명기된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토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 특별한 사유는 많고 많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와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왜곡과 항쟁과정 축소 등 수많은 오류가 이미 지적된 것이다. 내용의 전문성 결여, 해석의 정치적 편향성 등도 간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다.

따라서 전국의 13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온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억지로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일 게 아니다. 오류·왜곡투성이 교과서로 어찌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교육부는 이제라도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검, 정유라 씨 국내 송환에 총력 기울여야

마침내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얼굴을 드러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가 최근 현지에서 이뤄진 한국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화여대 학점 특혜,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 외국환관리법 위반, 도피 조력자에 대한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지만 정 씨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하나하나 답변했다.

자신에게 귀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은 구속된 최 씨에게 책임을 넘겼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은 "잘 모른다"고 넘어갔다. 이미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상당히 치밀하게 답변 준비를 마친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간호장교를 대신해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백 선생'(주사 아줌마)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씨의 이러한 답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정씨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로 촛불 민심에 불을 댕긴 장본인이다. 이제 특검의 당면 과제는 정 씨를 조속히 송환하는 것이다. 특검엔 시간이 많지 않다. 60일가량 남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정 씨를 송환 조사해야 한다. 정 씨의 송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입을 열게 만들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씨가 법적으로 다툴 경우 송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정 씨가 범죄인 인도 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송환하기까지 2년 이상 걸린 전례도 있다. 따라서 특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 씨를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자성어 신년사

정치인이나 CEO들은 신년사에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한다. 정치 지향점이나 경영 목표 등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메시지로 촌철살인의 사자성어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이란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제 위기감이 더해져 올해는 유난히 사자성어 신년사가 많다.

정치권에선 대선 주자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제로 사자성어를 쏟아 내고 있다. 국정 농단으로 국민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표심을 겨냥하는 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에서 '재조산하'(再造山下)를 내세웠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의가 이긴다는 뜻으로 '사불범정'(邪不犯正)을 택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혁고정신'(革故鼎新·낡음을 청산하고 새로움을 창조한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불파불립'(不破不立·깨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이 쌓여 바다를 이룬다)를 꺼냈다.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일호 부총리가 사용했다.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지지율 정체에 빠진 안 대표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경제계에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린다)을 언급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다시 맨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연비어약'(鳶飛魚躍·솔개는 날고 물고기는 뛴다)이라는 말로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사자성어에 강요를 담을 경우 역효과를 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이 터지자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직원들에게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말로 협박해 역대 최악의 사자성어 사용자가 됐다.

지난해 말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의 뜻을 담아 '송박영신'이란 사자성어를 만들어 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유민가외'(唯民可畏·천하에 두려운 것은 오직 백성뿐이다)를, CEO들은 '상행하효'(上行下效·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를 먼저 가슴에 새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